50, 2040, 3278…

타임誌 '올해의 숫자들' 선정

환경·인구·전쟁 등 심각성 반영

"50, 2040, 370억, 15억, 3억, 3천278…"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7일 인터넷판을 통해 2006년에 유행했던 숫자 10개를 발표했다.

비록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선정된 숫자들이지만 환경 및 인구·전쟁·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 인류에게 경종을 알리고 신선한 충격을 던졌던 의미있는 숫자들이 제시됐다.

▲50년=해양생물학자 연구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과잉어획과 공해가 계속될 경우 50년 이내에 해산물은 사실상 멸종.

▲2040년=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북극해 빙하가 모두 물로 녹아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

▲370억달러=미국에서 2번째 부자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 6월 자선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서약한 주식의 당시 액수.

▲15억달러=워런 버핏이 올해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액수. 이 기부금으로 게이츠 재단의 연간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남.

▲3억명=지난 10월 미국 인구가 3억명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

▲2043년=미국의 인구가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

▲3천278명=지난 2001년 이후 올해 12월15일까지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수.

▲5천20억달러=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전쟁 비용.

▲750만대=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지난 10월27일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21년간 생산한 토러스 승용차수.

▲3만8천명=올해 포드 자동차 노동자 가운데 명예퇴직키로 한 노동자 수.

/워싱턴=연합뉴스

김계관 "제재 지속 땐 核 강화할 밖에" 힐 "先 이행조치 행동으로 보여라"

■ 6자회담 첫날 北-美 충돌

18일 개막한 제5차 북핵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이뤄진 6개국 대표의 기조연설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번 회담이 최소치의 결과물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조연설로 본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간극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원하는 행동의 내용에 거리감에 있는데다 행동의 시기를 놓고도 입장 차이가 확연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 나온 북한의 입장은 회담 전부터 전문 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제시된 북한의 입장은 선(先)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 논의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 9·19 공동성명 탄생에 즈음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촉발된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9·19 공동성명'이라는 본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북한은 또 한·미·일 3국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핵 군축 문제도 꺼냈다. 김 부상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선)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핵군축 회담 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압력이 강화되고 지속될 경우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힐 차관보는 더이상 참기 힘들다며 이젠 빠른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 부상이 예시한 비핵화 논의를 위한 조건이다. 북한은 미국 내 대북 적대시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을 챙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동안 집착했던 BDA 해법에 협상력을 모을 경우 북미 금융제재 워킹그룹 협상과 6자회담이라는 2개 트랙의 상승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낸 '단계별 패키지 딜'이 힘을 발휘할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5차 2단계 본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저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 초청만찬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우다웨이 중국대표가 악수를 하자고 청하자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측 수석대표, 미국 측 수석대표 힐 동아태차관보,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무성 부부장, 북한 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러시아 측 수석대표 세르게이 라조프 주중대사. /베이징=연합뉴스

"北, 김정일 유고 땐 오극렬이 정국 장악"

국회 정보위 보고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유고시 오극렬(75·대장) 중앙당 작전부장이 정국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국회 정보위가 평화재단에 의뢰해 작성한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있어 비상사태는 당·정·군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로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 군부내 전군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부대가 없기 때문에 유력한 군부세력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 가운데 호위사령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작전부와 같은 독립부대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자기부대의 독자적 동원능력을 토대로 정국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오극렬 중앙당 작전부장이 다른 군 지휘관과는 달리 당 정치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원 능력과 명령-복종 체계 측면에서 가장 먼저 부대를 움직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오 부장은 군사적인 안목이 뛰어나 김 위원장이 그의 전략과 조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당 작전부는 특수지위에 걸맞게 잘 훈련된 인력들과 신무기로 무장된 정예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아미티지 前 미 국무부 부장관 '한반도 4가지 시나리오'

① 남, 북 계속 지원
② 북 정권 돌발 붕괴
③ 한·중국이 북 지원
④ 北 점차 강국 부상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핵 6자회담 참가 각국의 시각과 동기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실제 어떤 국가에 악몽의 시나리오가 다른 국가에는 좋을 수 있다면서 완전한 통일 전선이 가능할지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18일 요미우리신문 기고에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에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남한이 북한을 계속 지원, 북한이 온건한 경제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남북이 점진적 통일에 이르는 것.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제2의 시나리오로 북한 정권의 돌발 혹은 폭력적인 붕괴를 가정했다.

제3 시나리오는 한국과 중국이 제2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있어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마지막 시나리오로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단행, 강국으로 대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관계국들에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 특별기고

김용창 〈세종대 교수〉

"반값 아파트, 가능한가?"

전 세계가 21세기 첨단지식사회를 추구하는 마당에 온 국민을 퇴행적 부동산 고급 전문가로 육성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최근에는 '아파트 반값 정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반값 정책수단을 둘러싸고 또 다시 온 국민이 고급 부동산지식을 접하고 있다.

'아파트 반값 정치'가 장안의 화두로 등장한 이유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턱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율화 이전인 1998년 서울의 평당 분양가격은 520만원에서 올해 11월에는 1천538만원까지 올랐다. 광주지역의 경우도 평균 분양가격이 평당 593만원인 선인데 모 건설사가 평당 819만원으로 분양하면서 '거품 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등장한 '아파트 반값'의 정책수단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과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이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넘기지만 최초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얻게 될 수 있는 이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약간의 비용을 덧붙여서 되파는 일종의 처분권 제한방식이다.

대지임대부 방식은 건물은 분양하지만 땅은 빌려주는 방식이며,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토지임대료, 즉 토지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땅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반값 공급이 아니라 최초의 입주비용을 싸게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든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거나 부담하는 임대료가 낮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반값 정치'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재의 고분양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11·15 부동산대책'에서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 확보율 축소, 기반시설비용 국가예산투입 등의 방법으로 25% 내외의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높은 분양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비껴가기' 방식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택지조성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모호한 각종 부담금을 모두 신규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해당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분양가 인하는 건축비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의 원가연동방식 분양가상한제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격이 평당 372만5천원 수준이고, 가산비용을 더하면 평당 530만원 이상으로 높은 분양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분양가의 적정가격 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집승인보류가 가능해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입찰제의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판교의 44평형 기준 분양가격에서 28.6%(평당 532만원)를 차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분양가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를 변경하여 즉시 환수가 아니라 환매를 통한 공공관리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변수를 제외하고도 30% 이상의 상당한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25% 내외 인하방안을 추가할 경우 '아파트 반값'이 허망한 꿈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이나 주택가격의 절대적 인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최근의 논의가 대선국면의 일회성 정치놀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 놀음으로 끝나면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